

# ISSUE & FOCUS

Newsletter 2023-8

## 북한 핵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정부 · 군대 · 국민의 일치된 대비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북한은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면서 최근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한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크 밀리(Mark Milley) 미 합참의장은 2023년 7월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인 한국에서는 북핵 위협을 가급적이면 직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북핵에 심각성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정부, 군대, 국민의 삼위일체(三位一體)에 근거한 대비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 —북한의 핵 능력

북한의 극단적인 고립으로 인하여 북한 핵무력의 정확한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방법은 없다. 세계의 다수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20-60개의 숫자를 제

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약하다. 다소 현실적인 계산은 미국과 한국의 두 저명한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와 아산연구소가 2021년 4월에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에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연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반영할 경우 북한은 2022년 말에는 91~15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엄격한 명령-집행 체제를 고려할 경우 이 정도 숫자의 핵무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 시설을 직접 목격한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트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는 자신이 확인한 4,000개 정도의 원심분리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랜드와 아산의 추정이 크게 과도하지는 않다면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 일부 학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심분리기 숫자를 그대로 계산하여 북한이 2022년 말에 178~447발 정도까지 생산 가능한 핵물질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크게 비합리적인 추산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함께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과 개량에 주력해왔는데, 2017년 11월 화성-15형의 성공에 이어, 시험발사 및 열병식을 통하여 화성-16, 17, 18을 계속 과시하면서 ICBM을 다탄두가 가능하도록 대형화하고 있고, 고체연료 엔진으로 교체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7월 12일에도 이를 시험 발사하여 74분 간의 비행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2016년 8월 24일 북한은 1차 해상시험에 성공한 이래 북극성-3·4·5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개발하고 시험발사 및 열병식을 통하여 신형 SLBM들을 시연했다. 2021년 1월 북한은 핵무장 및 핵추진잠수함(SSBN) 설계 연구를 마쳤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은 제1격(first strike)은 물론이고, 미국의 제2격(second strike)에 대응할 수 있는 제3격 능력(third strike)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은 남한 공격용으로 첨단 단거리탄도탄(SRBM)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부터 북한은 미군이 KN-23, KN-24, KN-25로 명명한 일련의 SRBM에 관하여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이 SRBM들은 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발사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공격 마지막 단계에서 상승기동(pull-up maneuver)하기 때문에 미사일 요격도 어렵고, KNM-25의 경우에는 방사포를 개조한 것이어서 신속하게 저고도로 사격할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렵다. 북한은 그 동안 엄청난 수준으로 핵전력을 증강하는 데 성공하였다.

### **-남북한 군사력 비교**

그 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 비교는 많았으나 북한군의 양을 한국군의 질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것이 사실이다. 한국군의 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120만 명이나 되는 북한군의 숫자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포함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백서에서도 남북한 간 군사력 비교는 숫자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고, 핵무기는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다. 다만,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G20 국가의 종합국력을 평가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남북한의 군사력도 평가하고 있고, 특히 핵무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오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국방력은 8개의 유형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국방력 평가는 대체로 군사력의 다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 자체가 질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력 평가 8개 요소의 경우, ① “국방비”는 국방력을 평가하는 단일의 지수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될 정도로 보편적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고, ② “현역군인의 수”의 경우도 매우 대표적인 지표이다. ③ “예비역의 수”는 전쟁 지속력을 상징하는 지표라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육군, 공군, 해군의 전력인데, 육군의 대표적인 사항으로서 ④ “전차”와 ⑤ “대포”를 고려하였다. 해군의 경우에도 ⑦ “전투함”만 고려해도 가능하겠지만, ⑥ “잠수함”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포함시켰는데, 그만큼 잠수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의 경우 ⑧ “전투기”의 수가 대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방공분야가 공격분야 못지 않게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 무기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여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다른 분야만큼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항목별로 그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방예산의 경우 투입(input)을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국방력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3배수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현대전에서는 전투기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군은 현재 1개 요소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문제는 핵무기이다. 보통의 군사력 비교에서는 핵무기를 포함시키지 않는데, 지금처럼 핵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수시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다만, 핵무기가 압도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무기만 있다고 하여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로는 적국을 초토화시킬 수는 있지만, 정복하여 통제하도록 하는 무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고, 그러할 때 특유의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의 경우 독자적인 전력 지수를 산출하여 반영하기 보다는 전체 전력의 “승수효과(multiplier)”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승수효과의 정도인데,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다소 안정적인 억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육군, 공군, 해군에 있어서 전략사령부 또는 전략군이라는 4군 체제라고 봐서 1/4 (25%) 정도의 승수효과를

적용할 수 있고,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의 경우에는 15%의 승수효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중국이 더욱 많은 양의 핵폭탄과 다양한 투발수단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인도는 전략적 투발수단이 미흡하여 차이를 부여할 필요도 있지만, 지나친 세분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의 약속을 받은 국가들의 경우에게도 어느 정도의 승수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5% 정도의 승수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8가지 요소의 평가 중에서 가장 산정이 어려운 것이 북한의 국방비이다. 어디에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군은 군 예하에 다양한 영리사업체를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방비를 내각이 공개하는 국방예산 규모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한국 국방비의 1/3로 봐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남한은 계속 경제성장을 하고, 북한은 정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평가에서는 남한 국방비의 1/4 정도로 산정하였다.

북한의 경우 재래식 전력의 경우 질은 떨어질 것이 확실하지만 양적으로는 엄청난 숫자의 현역, 예비역, 전차, 야포, 잠수함, 전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핵전력의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왔고,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다른 핵보유국 중에서는 가장 다양한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개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잠수함발사탄도탄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전력은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1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 남북한만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북한은 당연히 G20에 들어갈 수 없지만,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방력만큼은 북한을 G20 국가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남북한 국방력 비교

국가명	종합(핵)		종합(비핵)		① 국방비 (bUSD)		②현역 군인 (천명)		③예비역 (천명)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수량	지수	수량	지수	수량	지수
남한	576	6	549	4	43	48	555	63	3,100	84
북한	630	5	548	5	11	46	1,280	50	600	51

국가명	④전차		⑤대포		⑥ 잠수함		⑦ 전투함		⑧ 전투기	
	수량	지수	수량	지수	수량	지수	수량	지수	수량	지수
남한	2,249	57	12,366	66	19	50	26	51	618	60
북한	3,500	66	21,600	83	71	73	2	43	545	49

<표 1>을 보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북한이 다소 유리한 상태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재래식 전력의 경우 북한은 현역, 전차, 대포, 잠수함의 숫자에서 남한을 압도하고 있고, 대체로 북한의 숫자와 남한의 크기(또는 질)이 상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육군의 경우 질적인 차이가 양적인 차이를 압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549 : 630으로 북한이 15% 강한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북한이 육군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전반적인 군사력 우위가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은 매우 열세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히 핵무기가 남한의 도시나 군부대에서 폭발하였을 경우 초래할 엄청난 공황상태와 국민 및 군인들의 심리적 동요를 고려하면 남한의 전력 발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 —북한의 “제2의 사명”과 한미의 “워싱턴 선언”

북한이 2022년부터 남한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제2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9월 그들의 핵무기를 비핵공격이 임박하거나 작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고, 남한에 대한 핵공격 모의훈련까지 실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핵무기의 승수효과를 더욱 높여야 할 수도 있다. 남한에 대한 공격을 노골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승수효과는 한국에 대해서만은 미국이나 소련이 갖고 있는 승수효과(25%)를 적용해야할 수도 있다. 이미 북한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전략군을 형성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위협 하에 단기속결전을 감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수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전쟁을 발발하는 것이 어차피 규탄받을 일이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승리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일 경우에는 그 승수효과가 30%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고, 전면적인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는 50% 정도로까지 승수효과를 고려해야할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미 핵우산도 북한의 위협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핵우산 협의를 위한 기구를 창설하고, 미 핵무장 잠수함을 한반도 근처에 수시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경우 미 핵우산의 승수효과는 10%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제한적인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전면적인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라면 미국의 핵우산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라고 가정해야 한다. 핵우산만 제공되면 북한을 미국의 대규모 핵무기에 의하여 초토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별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제시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상황별 남북한 군사력 비교**

상황			적용 승 수	재래식전력	산출 전 력	비율	비교
현재	남 한	워싱턴 선언	10%	549	604	1	미국의 확장억제 미제공 시는 1: 1.25
	북 한	제2의 사명	25%	548	685	1.1	
북한의 제 한 핵공격	남한		-	549	549	1	
	북한		30%	548	712	1.3	
북한의 전 면 핵공격	남한		-	549	549	1	
	북한		50%	548	822	1.5	

<표 2>를 보면, 북한의 핵전력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함께 고려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결과는 남한 604 대 북한 685로 북한이 10% 정도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25% 이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유하게 된다. 특히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군사력 차이는 30%를 상회하고, 북한이 전면핵전쟁을 가할 경우에는 50%를 상회하게 된다. 그런데,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이러한 전력 차이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핵무기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로서 모든 재래식 무기의 위력을 합친 것보다 큰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에 의하여 공격을 받을 경우 저항하여 초토화되거나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재래식 전력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확실하게 제공될 것이냐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에 대한 자체적인 억제 및 방어태세, 즉 자강(自強)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 북핵대응 전략과 대응체제 정립**

당연히 정부는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거나 유사시 방어하는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부처의 노력을 통합 및 조정해 나가야 한다.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동맹 및 우방국가와 효과적인 억제책을 마련하거나 군사적으로 자체적인 억제 및 방어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북핵 위협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정확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라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핵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체제부터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시키거나 북핵 담당의 제3차장을 신설하는 등 전문가

를 보완하여 북핵 컨트롤 타워로 지정함으로써 북핵 대응을 위한 국가의 모든 노력을 총괄하도록 하고, 국정원에는 북핵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해야 한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경우 북핵 방어와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도록 자체적인 조직을 보강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전 정부 차원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 및 국가 차원의 억제 및 방어 전략을 발전 및 구현해 나가고, 군에게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확장억제의 이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과정과 세부적인 절차들을 평시부터 발전시키고 필요한 합의를 명시하는 등 한미동맹 공약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북핵협의그룹(NCG)”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적극적이면서 실질적인 협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군대: 북핵 대응 전력증강에 집중

한국군은 군사 분야에서 국가의 핵억제 및 방어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여 나름대로의 북핵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더욱 세부적인 과제를 도출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국방부 및 합참은 북한의 핵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부터 개편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며, 간부들의 연구 및 논의 주제도 핵 대응 위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가용한 모든 노력과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조기에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군은 현재의 “3축 체계”를 “4축 +  $\alpha$ ”로 확대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능력의 확보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1축은 선제타격(Kill Chain)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발견한 이후 수분 내에 선제타격이 가능하도록 ‘킬 체인’의 시간을 단축하면서 결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 2축은 미사일방어(KAMD)로서, L-SAM이나 M-SAM 등 자체 요격미사일을 조기에 개발 및 전력화하면서 한미 양국 군의 미사일방어체제를 통합하고, 필요하다면 사드(THAAD)의 추가 배치도 제안해야 한다. 3축은 재래식 응징보복(KMPR)으로서, 북한 지도부의 동선을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인 침수작전 무기들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4축은 북한의 핵지휘통제체제 마비로서, 이를 위한 사이버 및 전자전 능력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한다. 추가적으로 북한 민주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고민해 나가야 한다.

특히 왕조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군은 KMPR의 구현을 위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는 데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 지도부야말로 북한의 ‘중심(center of gravity)’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자체적으로도 김정인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제거(de-capitation)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지하 병커를 공격할 수 있는 특수탄을 확보하는 등 능력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이



공격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성공하지도 못하고 보복만 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핵공격을 자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군 수뇌부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오로지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만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모든 군간부들은 핵전략과 핵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가져야하고, 그것을 구비한 요원들을 영전 및 진급시켜야 한다. 북핵 대응을 위한 최선의 전략개념, 긴급하게 보강되어야 할 능력들, 그에 따른 무기와 장비 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격렬한 토의를 군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은 간부들에게 군사이론 학습과 논의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해외 및 국내 자질향상 교육을 장려하여 간부들의 기본적인 지적 역량을 향상시키며, 전문성이 높은 간부들을 진급과 보직에서 우선해야 한다. 북핵과 그에 대한 억제 및 방어 이론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는 군 수뇌부가 존재해서는 곤란하다.

### **-국민: 정부와 군대의 대비태세 감독**

영국의 군사역사 학자인 하워드(Michael Howard)는 1979년 “전략의 잊혀진 차원(The Forgotten Dimensions of Strategy)”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표면적으로는 군수, 작전, 기술의 요소가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 즉 국민의 요소가 언제나 전쟁 승리에 드러나지 않는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핵전쟁에서는 국민들의 의지와 응집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이 더욱 중요하고, 전체주의 국가들은 이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와 대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민적 결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전쟁에 관한 국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실태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 즉 6.25전쟁 때 못다 이룬 남한 공산화를 핵무기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을 체제유지, 미국압박, 내부결속용으로 평가하면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북한과의 전쟁은 어떤 경우든 피해야 한다는 인식에 국민들이 사라잡혀 있을 경우 북한은 한국을 앞잡아보면서 핵무기 사용으로 한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고, 한국이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추가로 양보할 것을 강요할 것이다. 아무리 처참한 핵전쟁이라도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북한이 핵공격이나 위협을 자제할 것이다.

국민들은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강구함과 동시에 정부와 군대의 적극적인 지침과 지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민방위 훈련에 핵공격 상황을 포함시킴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발굴하여 시정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핵 대피에 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대피시설 및 대피요령을 구비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며, 국민들은 재원의 분담, 자치조직의 활성화,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협치기구를 통해 주기적으로 협의, 점검함으로써 전체적인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일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